

##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에 따른 세금부담 의향의 영향요인 분석: 정부역량인식과 정부신뢰를 중심으로\*

문승민\*\*

최선미\*\*\*

---

최근 초저출산·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정부의 복지 기능 및 복지 지출의 확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복지 확대를 위한 국민들의 추가 세금 부담의향은 매우 적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세 순응의 관점에서 정부신뢰 및 정부역량에 대한 인식이 세금부담의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신뢰는 조세 순응을 이끌어 내는 휴리스틱임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정부역량에 대한 인식과 조세 순응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고리임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정부가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사용하며, 지출 이상의 성과를 창출하더라도 정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조세 순응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조세 순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신뢰의 회복이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주제어: 정부 신뢰, 정부 역량, 조세 순응, 매개 효과

---

---

\* 본 논문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논평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NRF-2017S1A3A2067636).

\*\*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환경정책, 공공관리, 갈등관리 등이다(isuters@yonsei.ac.kr).

\*\*\*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부역량, 정부신뢰, 노인정책 등이다(sunmi2142@hanmail.net).

## I.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통계청, 2018)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4.3%로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0.3% 초과하였다(변수정·황남희, 2018:42).

이러한 인구사회학적인 변화는 소득 양극화와 저성장 등의 경제문제와 맞물려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기능 및 복지 분야 지출이 급격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변수정·황남희, 2018). 특히,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빈익빈 부익부 확대 및 빈곤의 대물림, 노동자 간·자영업자 간·기업 간 소득 격차의 확대, 재분배 정책 미비 및 지속적인 부의 축적의 문제 등을 동시에 겪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지출의 확대는 필요악(必要惡)으로 여겨지기도 한다(김수완 외, 2018)

실제 우리나라 복지 분야의 법정지출액은 2019년 기준 106.7조원(본예산)으로 전체 예산 469.6조의 약 22.7%, 전체 의무 지출의 44.6%를 차지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9:2). 이는 교육, 문화·체육·관광,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을 포함한 정부의 주요 지출 분야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또한 복지 분야의 지출은 연평균 6.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4대 공적연금의 수급자 증가 등을 고려하면, 점차 규모와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기획재정부, 2019:2). 실제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15년에는 10.2%, 2016년에는 10.5%, 2017년 10.6%, 2018년 11.1%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OECD 국가들의 평균 사회복지지출 비중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사회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sup>1)</sup>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기능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복지 지출의 확대는 국가 재정 건정성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복지지출 확대를 대비하여 재원을 마련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 확대에 따른 조세 지출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 김성태·김명규(2015:6)는 “적정 복지지출 수준의 결정은 실증적인 문제의 속성과 규범적인 문제의 속성이 혼재한 문제이며 중앙기에 걸친 동태적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재정패널 설문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12월에 발간된 ‘10차년도 재정패널 조사 기초분석보고서’를 살펴보면,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시 세금 추가 부담에 있어서는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60.7%로 나타났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바로 직전해인 2017년의 경우에도 약 64.9%의 응답자가 세금 추가 부담의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증세에 따른 세금 추가 부담 의향이 부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결국, 복지 확대에 따른 조세 부담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 간 인식차이는 종교적으로 국가 복지 정책에 대한 불수용과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세 순응(Tax Compliance)’의 관점에서 사회복지비 지출 확대에 따른 국민들의 조세 부담 의향의 영향요인들을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정부 신뢰와 정부역량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조세 순응을 분석한 국외 연구들은 정부 신뢰가 조세 순응을 이끌어 내는 일종의 휴리스틱(heuristic)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조세 순응을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정부 신뢰와 조세 순응 간의 상반된 결과들이 혼재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정부 신뢰가 조세 순응을 이끌어 내는 휴리스틱(heuristic)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함과 동시에 이들 간의 새로운 매커니즘을 규명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신뢰가 조세 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정부신뢰가 정부 역량에 대한 인식과 조세 순응 간의 매개 변인의 기제로 작동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정부신뢰는 정부의 역량을 바탕으로 구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Mayer et al., 1995; 김태형 외, 2016; 황창호 외, 2017) 국민들의 대정부 역량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를 통해 또는 직접적으로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역량, 정부신뢰, 조세순응 간의 연결고리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조세순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논의 바탕으로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연구의 설계 과정을 제시한다. 제4장은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에 따른 세금부담 의향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 II. 이론적 배경

조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태도는 오랜 기간 동안 주요 연구 대상이었지만 이를 설명

하는 보편타당한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Alm & Torgler, 2011; 강민조, 2017). 따라서 납세자들의 동기와 태도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과 요인들이 규명될 필요가 있으며, 경제학, 심리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분야에서 이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가 꾸준한 이루어지고 있다(강민조, 2018).

조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태도는 주로 ‘조세 순응(Tax compliance)’의 관점에서 논의 되어왔다. 조세 순응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국가의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이를 보고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조세 순응에 대한 이론은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특히, 탈세) 태도를 설명하고자 한다.<sup>2)</sup>

경제학적 관점에서 납세자의 태도는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하여 효용을 극대화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납세자는 탈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득과 탈세에 따른 처벌의 손해를 비교하고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 하는 행태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Scholz & Pinney, 1995; Scholz & Lubell, 1998; Alm & Torgler, 2011).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납세자의 태도가 단순히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경제적·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좌우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Wenzel, 2004; Kirchler, 2007; Luttmer & Singhal, 2014; 김춘홍, 2012; 신나리 외, 2017; 강민조, 2017; 2018).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탈세 행위가 사회적 일탈행위임을 인식하는 납세자일수록 보다 성실하게 납세하는 경향을 보이고(Alm & Torgler, 2011; 강민조, 2017), 조세에 대한 공평성(수직적, 수평적, 교환적)도 성실한 납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sup>3)</sup>

한편, 사회적 교환(Exchange Context)의 관점에서 납세자의 행태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다(Scholz & Lubell, 1998; 신나리 외, 2017). 이러한 관점은 정부가 납세자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대가로서 조세 부담에 순응한다는 점을 강

2) 세금을 부담하려는 태도는 납세 의식의 개념으로도 설명된다(박명호, 2016). 조세순응 연구에서 납세 의식은 “납세의 내적동기(Intrinsic Motivation to Pay Taxes)’ 또는 ‘세금을 기꺼이 지불하려는 의사(Willingness to Pay Taxes)’로 정의된다(박명호, 2016; 강민조, 2017: 314에서 재인용).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결국 조세 순응은 납세에 순응하는 태도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신나리 외(2017: 172)는 조세에 대한 공평성을 수직적, 수평적, 교환적 공평성으로 구분하여 납세자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수직적 공평성을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세제도가 소득수준을 잘 반영한 공평한 시스템인지 아니면 특정한 계층에 유리한 것인지”로 보았으며, 수평적 공평성은 “본인의 소득수준과 비슷한 납세자그룹과 비교한 본인의 세부담의 수준이 적절한 지”로 보았다. 교환적 공평성은 “답례액 대비 공공재로부터의 효익 수준의 정도”로 보았다.

조한다. 즉, 납세자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에 대한 거래로서 납세에 대한 순응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Cowell & Gordon, 1988; Scholz & Lubell, 1998). 그러나 납세자가 느끼는 공공서비스의 가치는 공공서비스의 유형, 제공과정 등에 따라 상이하며, 이러한 인식은 납세의향 혹은 납세순응의 정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신나리 외, 2017).

사회적 교환과 거래의 관점에서 정부 신뢰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Scholz & Pinney, 1995; Scholz & Lubell, 1998). 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점차 불확실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정책 목표의 달성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책에 대한 지지와 정당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여 정책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Jones, 1995; Bromiley & Cummings, 1996; Evans, 1996; 김병섭, 1986; 문승민·최선미, 2018). 따라서 불확실한 정책 환경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Bouckaert et al., 2002; 송현진 외, 2019).

일반적으로 신뢰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이에 따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경향을 의미하며(Rousseau et al., 1998; Dasgupta, 2010; Jimenez & Iyer, 2016; 김준홍, 2012:131), 정부에 대한 신뢰는 조세 순응을 이끌어내는 일종의 휴리스틱이 될 수 있다(Scholz & Pinney, 1995; Scholz & Lubell, 1998; Jimenez & Iyer, 2016).

Scholz와 Lubell(1998)은 조세 순응의 행태를 집합행동과 무임승차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시민들은 세금을 내고 정부는 그 대가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만약 납세에 따른 미래의 세수혜택(예; 공공서비스)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납세를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거래관계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 행태를 보이며, 그 결과 집합행동과 무임승차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시민과 정부 간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거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단순화 시키는 휴리스틱임을 지적하였다.

즉, 이러한 관점은 개인이 간단한 의사결정방식을 이용해 정부의 활동에 대한 지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주장한다(Hetherington, 2005). 따라서 정부를 '신뢰' 할 수 있다고 인식할 때, 조세를 부담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인식할 경우 조세를 부담하지 않는 행태를 보일 수 있다(Rudolph, 2009; Jimenez & Iyer, 2016). Togler(2007)는 자발적인 조세 순응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때, 납세자와 정부와의 관계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Scholz과 Lubell(1998),

Jimenez와 Iyer(2016)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지각된 공정성에 영향을 미쳐 조세에 대한 순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정부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의 조세 정책을 지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재분배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엇 보다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납세자의 정부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복지서비스 조세부담의 순응도가 높을 것이다.**

한편, 국내 정부 신뢰와 조세 순응을 분석한 연구들 간의 상반된 결과가 혼재한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조세 순응 간의 관계를 분석한 김준홍(2012)의 연구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정치에 대한 신뢰가 조세순응의 태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예측하지 못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이유를 “한국의 사회자본인 신뢰가 가지는 정파적, 배타적 속성에 기인 한다”고 보았다(김준홍, 2012:131).<sup>4)</sup> 가상적 상황에서 정부 신뢰가 조세 순응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강민조(2018)의 연구결과에서도 정부 신뢰는 조세 순응 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up>5)</sup> 반면, 박명호와 백용기(2019)의 연구에서는 국세청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납세(조세) 순응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정부신뢰와 조세 순응 간의 관계가 일관되지 않은 것은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정부신뢰와 조세 순응 간의 단선적인 관계 외에 이들을 매개로 한 다른 인과 기제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 신뢰와 조세 순응 간의 인과 기제를 새롭게 탐색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정부 신뢰의 개념은 매우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정부신뢰는 일반적인 신뢰의 개념을 차용하여,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심리적 태도로 정의된다(이현국·김윤호, 2014; 송현진 외, 2019). 이러한 태도의 기저에는 정부가 시민들의 기대에 따라 운영 되고 정책 산출물이 국민들의 선호에 부합될 것 이라는 믿음이 있다(Gamson, 1968; Miler, 1974:989;

4) 이밖에도 연구에서 이용한 정부신뢰 및 정치신뢰 변수의 중심 경향성과 변이성 때문으로도 보았다.

5) 강민조(2018)의 연구에서 정부의 힘과 정부 신뢰는 단일 차원에서 납세에 대한 태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Hetherington, 1998:791, 윤상오, 2015:31, 문승민·최선미, 2018:12; 송현진 외, 2019). 따라서 정부의 신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산출물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 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들은 정부의 역량 및 정부역량에 대한 인식이 정부 신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하고 있다(Mayer et al., 1995; 김태형 외, 2016; 황창호 외, 2017; 송현진 외, 2019). 정부 역량의 개념은 정부 신뢰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성과를 달성하는 능력 또는 업무수행 역할에 대한 기대를 비롯한 전문적인 지식, 능률성 등의 개념으로 정의된다(오경민·박홍식, 2002; 송현진 외, 2019). 황창호 외(2017)와 김태형 외(201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예산 비용 절감 노력에 따른 비용 효율성 확보가 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출한 이상의 업무성과를 창출 할 때,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향상된다.

이를 통해 볼 때, 국민들은 자신이 지불한 세금을 정부가 효율적으로 관리·집행하고 보다 많은 성과를 창출한다고 인식할수록 정부를 보다 신뢰할 것이고 이는 조세에 대한 순응 수준을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즉, 정부역량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국민들은 조세 부담에 따른 개인적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세 부담과 관련된 정부의 역량에 대한 인식을 '국민이 지불한 세금을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관리 역량에 대한 인식'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정부의 관리 역량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고, 조세순응도 잘 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 III. 연구 설계

####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조세순응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정부의 질과 정부신뢰 통계조사' 설문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2018년 10월 19일부터 2018년 11월 2

일까지 약 14일 간 실시되었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일 반국민)이며, 표본들은 한국리서치 MS 패널 약 40만명으로 성·연령·지역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 할당하여 추출하였다. 표본들을 대상으로 리서치 MS 패널을 통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의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방법(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ing, CAWI)이다. 본 설문조사에 최종적으로 총 1,006명이 응답하였으며, 이중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 질문에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117명을 제외한 889명을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비례할당 추출을 방식을 통해 구성되었으며, 데이터의 최종진행 쿼터 및 기술통계 결과(표 3)참조를 통해 볼 때, 그룹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

### 1) 종속변수

납세자의 조세 순응을 측정하는 방식은 선행연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신나리 외(2017:171)는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이 제공하는 5차년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조세순응 수준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의 찬성여부를 통해 조세순응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해당 측정도구는 Likert 5점 척도(1 매우 찬성한다~5 매우 반대한다)로 구성되었다.

강민조(2017)의 경우도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의 9차 재정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세순응의 의도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득신고의 성실도를 통해 납세자의 조세순응 의도를 측정하였다. 해당 측정도구는 11점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값이 클수록 가상적인 상황에서 더욱 높은 비율의 소득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의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강민조, 2017:318).

김준홍(2012)은 2004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2004)를 이용하여, 조세 순응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조사대상자들에게 “사람들은 좋은 국민이 되는데 무엇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라고 물은 뒤 “결코 탈세하려고 하지 않는다”에 항목에 매긴 점수를 측정하였다. 측정의 척도는 Likert 7점 척도(1 전혀 중요하지 않다~7점 매우 중요하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조세순응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현재보다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질문에 대해



‘예’, ‘아니오’, ‘모르겠음’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대상자(N=117)는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종속변수를 예(=1), 아니오(=0)로 더미 변수화 하였다.

##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정부신뢰와 정부역량이다. 정부신뢰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 혹은 시민들의 정치적 태도로 정부가 국민 혹은 시민들의 예측 또는 기대에 부응하여 운영되는 정도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Hetherington, 2005; 손호중·채원호, 2005; 문승민·최선미, 2018:130에서 재인용).

많은 선행연구들은 정부신뢰를 단일 문항을 통해 측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다중 문항을 구성하였다. 다중 설문문항은 ‘나는 정부를 신뢰 한다.’, ‘정부의 정책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어도 나는 그것을 기꺼이 감수할 용의가 있다.’,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을 면밀히 알지 못할지라도 정부가 하는 결정은 옳다고 받아들인다.’이다(오경민·박홍식, 2002; 문승민·최선미, 2018).

본 연구는 정부의 역량에 대한 인식을 ‘조세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이를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를 측정하기 위해 다중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사용한다.’, ‘정부는 예산을 지출한 이상의 업무 성과를 낸다.’이다.

## 3)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성향이다. 선행연구들은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조세의 순응에 부정적임을 확인하였다(강민조, 2017:322; 신나리 외, 2017). 신나리 외(2017)는 납세자의 거주지역이 정치적·사회적 성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통일세 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남지역이 통일세 담세 의향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지역이 대북 문제에 대한 보수적 정치신념을 가졌기 때문으로 보았다. 강민조(2017:316)는 보수적인 성향일수록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개인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충돌할 때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 분석결과,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소득 신고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주장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조세순응에 부정적일 것으로 보았다.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구성하여 정치성향을 측정하였고 1에 가까울수록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둘째, 성별이다. 박명호와 백웅기(2019)의 연구결과에서는 남성일수록 조세 순응에 긍정적이었으며, 김준홍(2012), 신나리 외(2017)의 연구결과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조세 순응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민조(2017)의 연구에서는 성별과 조세 순응과의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처럼 성별에 따른 조세 순응의 수준은 선행연구들 간 혼재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성별을 단순히 인구통계학적 요소로 파악하고 있을 뿐 성별과 조세 순응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남성을 준거로 하는 더미변수를 구성하여, 조세 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강민조, 2017; 박명호·백웅기, 2019).

셋째, 생산가능인구이다. 생산가능인구는 비생산인구에 비해 조세 부담의 의무를 지고 있다(신나리 외, 2017). 특히, 사회복지서비스는 재분배적인 성격이 강하고 납세자와 수혜자 간의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는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에 따른 조세 부담에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와 비생산인구를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생산가능인구는 일반적으로 15세부터 64세까지를 의미하나 본 연구의 응답자는 20세 이상 성인남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산가능인구를 20세부터 64세까지로 정의하고 이를 더미 변수화 하였다. 비생산 인구는 65세 이상을 의미한다(신나리 외, 2017).

〈표 1〉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

변수		변수의 내용	측정
종속	조세 순응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현재보다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1), 아니오(=0)
독립	정부 신뢰	1) 나는 정부를 신뢰한다	매우 반대(1)~ 매우 동의(5)
		2) 정부의 정책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어도 나는 그것을 기꺼이 감수할 용의가 있다.	
		3)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을 면밀히 알지 못하더라도, 정부가 하는 결정은 옳다고 받아들인다.	

변수	변수의 내용	측정	
정부역량인식	1)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사용한다		
	2) 정부는 예산을 지출한 이상의 업무 성과를 낸다.		
통제	정치성향	귀하의 이념적 성향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보수적(1)~매우 진보적(5)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1), 여(=0)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비생산인구	20~64세(=1), 65세 이상(=0)
	교육수준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고졸 이하(준거), 고졸 이상~4년제 대졸 이하, 대학원 졸업 이상을 더미 변수화
	가구소득	귀댁의 한달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200만원 이하(준거), 20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400만원 미만, 400만원~500만원 미만, 500만원~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을 더미 변수화
	혼인	귀하의 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	기혼(=1), 기타(=0)
	직업	귀하의 현재 직업은 어느 부문에 속하십니까?	있음(공공·민간부문=1), 없음(고용되어있지 않음=0)
종교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있음(천주교·개신교·불교·기타=1), 없음(무교=0)	

자료: 정부의 질과 정부신뢰 통계조사 결과보고서(2018)

넷째, 교육 수준이다. 강민조(2017:322)의 연구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신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춘홍(2012)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조세 순응의 태도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명호와 백용기(2019)의 연구에서는 교육의 수준이 낮을수록 납세 순응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이 조세 순응이 미치는 영향은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결과들이 혼재되

어있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다만, 교육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세 제도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으므로 조세 순응의도가 높아진다는 암묵적인 가정을 하고 있어(Jackson & Milliron, 1986; 강민조, 2018), 본 연구에서도 교육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세 순응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았다. 교육 수준의 측정은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더미 변수화 하였다.

다섯째, 소득 수준이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재분배적인 특징으로 인해 납세자와 수혜자 간에 편익이 괴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간의 조세 순응 수준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조세에 대한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신나리 외, 2017). 본 연구는 소득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가구소득 수준을 활용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흔히 이용되는 변수로 월평균 소득수준을 측정하여, 더미 변수화 하였다(김춘홍, 2012; 신나리 외, 2017).

여섯째, 혼인의 여부, 직업의 유무, 종교의 유무이다. 이들 변수들은 성별 변수와 같이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김춘홍, 2012; 강민조, 2017; 신나리 외,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인구통계학적인 특성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조세 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혼인의 여부는 기혼(=1), 기타(=0)로 직업의 유무는 있음(=1), 없음(=0)으로 측정하였다. 종교의 유무는 천주교, 개신교, 불교, 기타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를 준거로 하는 더미 변수로 측정하였다. 다음 <표 1>는 본 연구의 변수를 정리한 것이다.

### 3.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크론바흐 알파 계수값(Cronbach's  $\alpha$ )을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프로맥스(Promax) 사각 요인 회전방식(Oblique Factor Rot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요인 적재 값을 산출하였다. 다음 <표 2>는 요인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변수별 문항이 모두 적합하게 분류되었으며, KMO 값은 0.7814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Kaiser, 1974).

일반적으로 크론바흐 알파계수 값이 0.7 이상인 경우 측정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0.8 이상이면 일관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의 정부신뢰, 정부역량에 대한 문항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 값은 각각 0.8145와 0.8394로 신뢰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의 문항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요인분석 결과

요인	분류	성분		Cronbach's $\alpha$
		1	2	
1) 정부신뢰		0.6669	0.1823	0.8145
2) 정부신뢰		0.6702	0.0061	
3) 정부신뢰		0.7522	0.0372	
1) 정부역량		0.0572	0.7601	0.8394
2) 정부역량		0.0695	0.7580	

#### 4. 분석 방법 및 모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두 가지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첫째, 정부 신뢰가 조세 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세금부담 의향으로 더미(Dummy) 변수이다. 즉, 세금부담 의향이 있음(=1)과 의향이 없음(=0)으로 구분된다. 종속변수가 이분형(Binary)인 경우, 회귀분석에서 가정하는 동분산(Homoskedasticity)의 가정을 위배한다. 따라서 최소 자승(Ordinary Least Square, OLS)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통계량은 효율적인 일치추정량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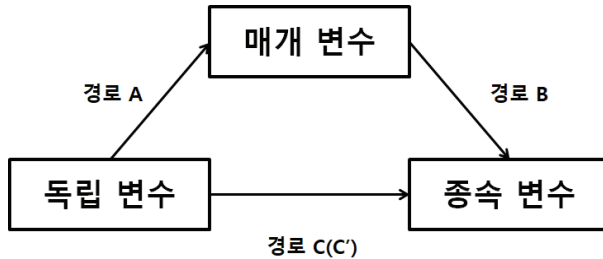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로짓(Logit) 회귀 모형을 이용하였다. 상기 모형은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실시하여 모수 추정의 일치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독립변수의 선형 결합을 이용해 종속변수의 발생 확률을 예측하는 데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로짓 회귀 모형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는 로지스틱 함수이다.

한편, 로짓 회귀분석의 회귀 계수는 선형회귀분석(OLS)에서처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별도로 산출하여야 한다. 로짓 회귀분석에서 한계효과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는 평균값을 이용하는 것과 한계효과를 평균값을 이용하는 것이다(양정승, 2015:34). 본 연구는 양정승(2015)의 연구에서와 같이 후자의 방법을 이용하여 한계효과를 도출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위해 Stata 15.1 버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둘째, 정부 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였다(문승민·최선미, 2018; 문승민, 2019). Baron & Kenny(1986:1176)의 검증 방식은 다음 분석절차를 통해 매개효과를 판단한다. 먼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경로 A). 다음으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경로 B). 셋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경로 C).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모두 투입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경로 C'). 위와 같은 절차를 다음 <그림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 Baron & Kenny의 매개효과 검정



한편, 매개효과와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검정하기 위해 주로 Sobel 검정을 이용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Baron & Kenny 방식을 통해 도출된 매개효과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Sobel 검정의 대안으로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제시하고 있다(Hayes,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Baron & Kenny의 매개효과 검정 방식을 통해 도출된 매개 효과를 Bootstrap을 통해 검정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위해 SPSS 25 버전과 Andrew, F. Hayes가 고안한 Process Macro v3.4를 이용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기술통계

다음 <표 3>는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현재보다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06명(34.4%)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재정패널 설문조사의 결과 값과 유사하다. 조세재정패널에서는 ‘복지확대를 위해 본인의 세금을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는가?’를 질문하였으며, 2016년에는 35.5%, 2017년에는 39.7%가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테일리, 2018.7.5.). 이를 종합하면, 본 연구의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

인할 수 있고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확대보다는 이에 대해 반대하거나 의견이 없는 사례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신뢰에 대한 평균값은 값은 2.67로 측정단위의 평균값인 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다소 낮다. 이러한 인식의 경향은 정부역량에서도 재확인 된다. 정부 역량의 평균값은 2.34로 정부 신뢰의 평균값인 2.67 보다 낮다. 이를 종합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과 재정 집행 역량의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치에 대한 성향은 평균 3.04로 중도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응답자의 성별은 각각 남(51.5%), 여(48.5%)로 균등하다. 생산가능인구(20세~64세)는 89.7%로 표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세~67세)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3.2%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인해 고졸 이상인 응답자가 전체 표본의 7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의 경우 월 300만원~400만원 미만 응답자가 200명(22.5%)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연구대상의 소득 수준은 균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혼인의 경우 기혼인 응답자가 과반 수 이상(70.75%)이며, 직업이 있는 응답자는 528명(59.4%)이다. 종교의 경우 '없음'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450명(50.6%)이다.

〈표 3〉 기술통계 결과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조세 순응	예(N=306, 34.4%) 아니오(N=583, 65.6%)			
정부 신뢰	2.67	0.84	1	5
정부 역량 인식	2.34	0.92	1	5
정치 성향	3.04	0.86	1	5
성별	남(N=458, 51.5%), 여(N=431, 48.5%)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N=797, 89.65%) 비생산인구(N=92, 10.35%)			
교육 수준	고졸 이하(N=194, 21.8%) 고졸 이상~4년제 대졸 이하(N=579, 65.1%) 대학원 졸업 이상(N=116, 13.1%)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가구 소득	200만원 이하(N=115, 12.9%)			
	200만원 - 300만원 미만(N=134, 15.1%)			
	300만원 - 400만원 미만(N=200, 22.5%)			
	400만원 - 500만원 미만(N=143, 16.1%)			
	500만원 - 600만원 미만(N=121, 13.6%)			
	600만원 이상(N=176, 19.8%)			
혼인	기혼(N=629, 70.75%)			
	미혼(N=260, 29.25%)			
직업	있음(N=528, 59.4%)			
	없음(N=361, 40.6%)			
종교	있음(N=450, 50.6%)			
	없음(N=439, 49.4%)			

주: N=889

## 2. 조세순응의 영향요인 분석

다음 <표 4>, <그림 2>은 정부신뢰가 조세 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며, 정부신뢰는 0.1% 유의수준( $P < .001$ )에서 조세순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신뢰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한계 효과는 응답 점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약 15.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다른 변수들에 비해서도 그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에 대한 신뢰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세 부담에 따른 개인적 위험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즉,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정부 신뢰가 조세 순응을 이끌어 내는 휴리스틱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Scholz & Lubell, 1998; Jimenez & Iyer, 2016). 또한 정부 신뢰는 그 자체로 정부에 대한 기대와 이에 따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경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Rousseau et al., 1998; Dasgupta, 2010; Jimenez & Iyer, 2016; 김준홍, 2012:131; 문승민·최선미, 2018; 송현진 외, 2019),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가설 1인 “납세자의 정부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복지서비스 조세부담의 순응도가 높을 것이다”를 채택하였다.

한편,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사회복지비 지출에 따른 조세 부담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sup>6)</sup> 이는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이 큰 정부보다 ‘작

6) 정치성향 변수는 1에 가까울수록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므로 회귀계수의 부호가 양(+)이라



은 정부'를 선호한다는 점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은 다른 그룹에 비해 조세 순응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은 추가적인 조세 납부가 실질적으로 큰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아 조세 저항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4〉 조세순응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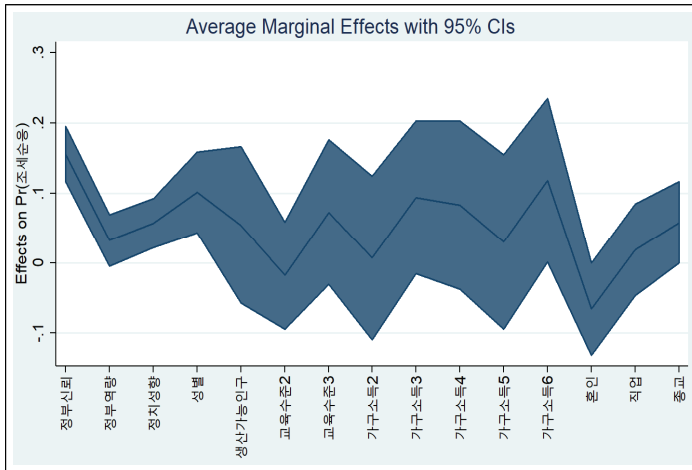
변수명	Coef	Odds Ratio	한계효과 (dy/dx)
정부 신뢰	0.843*** (0.120)	2.324*** (0.278)	0.156*** (0.020)
정부 역량	0.175 (0.102)	1.192 (0.122)	0.032 (0.019)
정치 성향	0.311** (0.010)	1.364** (0.136)	0.057** (0.018)
성별	0.547** (0.162)	1.728** (0.280)	0.101** (0.029)
생산가능인구(20세-64세)	0.295 (0.310)	1.343 (0.416)	0.055 (0.057)
고졸이상~4년제 대졸 이하	-0.096 (0.212)	0.909 (0.192)	-0.018 (0.039)
대학원 졸업 이상	0.394 (0.288)	1.483 (0.426)	0.073 (0.053)
200만원 - 300만원 미만	0.040 (0.323)	1.040 (0.336)	0.007 (0.060)
300만원 - 400만원 미만	0.507 (0.303)	1.661* (0.503)	0.094 (0.056)
400만원 - 500만원 미만	0.448 (0.332)	1.565 (0.519)	0.083 (0.061)
500만원 - 600만원 미만	0.163 (0.343)	1.177 (0.404)	0.030 (0.063)
600만원 이상	0.638* (0.325)	1.893* (0.614)	0.118* (0.060)
혼인	-0.356 (0.183)	0.701 (0.128)	-0.066 (.034)

는 것은 보수적인 정치성향 일수록 조세순응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변수명	Coef	Odds Ratio	한계효과 (dy/dx)
직업	0.105 (0.181)	1.110 (0.201)	0.019 (0.033)
종교	0.315 (0.163)	1.371 (0.223)	0.058 (0.030)
상수항	-5.244*** (0.563)	0.005*** (0.003)	-
LR chi2(15)	122.36***		
Pseudo R <sup>2</sup>	0.147		
Log Pseudo-likelihood	-487.95		
N	889		

- 주 1) \*P<.05, \*\*P<.01, \*\*\*P<.001  
 2) 회귀계수 및 오즈비의 괄호안은 Roubst Standard Error이며, 한계효과와 괄호안은 Delta Method Standard Error임  
 3) 교육수준 준거(고등학교 졸업 이하), 소득수준 준거(200만원 이하)

〈그림 2〉 한계 효과



주: 교육수준2(고졸이상~4년제 대졸 이하), 교육수준3(대학원 졸업 이상), 가구소득2(200만원 - 300만원 미만), 가구소득3(300만원 - 400만원 미만), 가구소득4(400만원 - 500만원 미만), 가구소득5(500만원 - 600만원 미만), 가구소득6(600만원 이상)

둘째, 가설 2의 검정을 위한 매개효과 분석은 Baron & Kenny(1986)의 검정 방식과 Bootstrap을 통해 실시하였다.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정방식은 크

계 3번의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해, 각 단계에서 독립 및 매개 변수들의 회귀계수와 통계적 유의미성을 살피고 매개효과와의 여부를 파악한다.

다음 <표 5>, <표 6>, <표 7>은 정부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이다. 먼저, 1단계 절차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의 변량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지를 살펴본다. 즉, 정부 역량이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 <표 5>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정부 역량은 1% 유의수준( $P<.001$ )에서 정부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단계 절차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량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지를 살핀다. 즉, 정부 역량이 조세 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 <표 6>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정부 역량은 1% 유의수준( $P<.001$ )에서 조세 순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단계 절차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의 변량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지를 살핀다. 이 과정에서 독립 변수가 종속변수의 변량을 통계적

**<표 5> 정부 신뢰의 매개효과 검증(1)**

종속변수 (정부신뢰)	Coef(S.E)	$R^2$	F
정부 역량	.470(.026)***	.354	34.19***
정치 성향	.186(.028)***		
성별	.021(.047)		
생산가능인구(20세-64세)	.001(.081)		
고졸이상~4년제 대졸 이하	-.064(.060)		
대학원 졸업 이상	-.047(.085)		
200만원 - 300만원 미만	-.043(.089)		
300만원 - 400만원 미만	-.090(.084)		
400만원 - 500만원 미만	-.081(.092)		
500만원 - 600만원 미만	-.099(.095)		
600만원 이상	.003(.089)*		
혼인	.147(.055)		
직업	.068(.051)		
종교	.074(.047)		
상수항	.914(.136)***		

주 1) \* $P<.05$ , \*\* $P<.01$ , \*\*\* $P<.001$

2) N=889

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할 경우, 완전 매개가 이루어 졌다고 한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더라도 회귀 계수의 값이 작아지는 경우, 부분 매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문승민·최선미, 2018; 문승민, 2019).

3단계 분석 절차는 <표 4>에 제시되어있으며, 정부 역량은 조세 순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신뢰는 정부 역량과 조세 순응 간의 관계를 완전히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5>와 <표 6>에서 일관되게 정치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정부신뢰가 높게 나타났으며, 조세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정부신뢰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정부신뢰에서의 '정부'의 의미를 현재의 정권 또는 행정부, 행정부 관료, 행정부를 포함한 입법, 사법부 전반의 국가 등으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을 때, 현재의 진보정권에 대한 신뢰를 정부신뢰로 간주할 경우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조세순응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Baron & Kenny(1986) 검정방식은 매개효과의 회귀계수가 정규분포를 이

**<표 6> 정부 신뢰의 매개효과 검정(2)**

종속변수 (조세 순응)	Coef(S.E)	R <sup>2</sup> (pseudo)	LR Chi <sup>2</sup> (df)
정부 역량	.531(.087)***	.102	116.4 (14) ***
정치 성향	.441(.094)***		
성별	.541(.156)**		
생산가능인구(20세-64세)	.269(.285)		
고졸이상~4년제 대졸 이하	-.131(.201)		
대학원 졸업 이상	.336(.276)		
200만원 - 300만원 미만	.026(.306)		
300만원 - 400만원 미만	.434(.285)		
400만원 - 500만원 미만	.368(.312)		
500만원 - 600만원 미만	.096(.324)		
600만원 이상	.632(.302)*		
혼인	-.223(.177)		
직업	.155(.169)		
종교	.349(.156)*		
상수항	-4.21(.498)***		

주 1) \*P<.05, \*\*P<.01, \*\*\*P<.001

2) N=889

〈표 7〉 정부 신뢰의 매개효과 검증(3)

효과	경로	Effect	S.E	LLCI (BootLLCI)	ULCI (BootULCI)
직접	정부 역량 인식 → 조세 순응	.175	.105	-.031	.381
간접	정부 역량 인식 → 정부 신뢰 → 조세 순응	.396	.064	(.287)	(.537)

주 : N=889, Bootstrap=5,000

룬다는 가정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Hayes, 2009). 따라서 매개효과와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여 매개 효과를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표 7〉 같다.

부트스트랩(Bootstrap)은 신뢰 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이용하는 비모수 검정방식으로 95% CI 내에 매개 효과의 회귀계수 값 0이 포함되면,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트스트랩(Bootstrap)을 5,000회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간접)의 계수 값은 .3959이며, 95%의 신뢰구간은 하한 .2869 상한 .5368로 나타났다. 즉, 0의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반면, 정부 역량 인식이 조세 순응에 미치는 매개효과(직접)의 계수 값은 .175이며, 95%의 신뢰구간은 하한 -.031 상한 .381로 나타나 0의 값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정부신뢰는 정부 역량 인식과 조세 순응 간의 관계를 완전히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관리역량에 대한 인식이 높을 경우 정부신뢰 수준이 높고 조세순응과도 양의 관계를 가지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정부가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지출한 이상의 업무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인식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 역시 높게 나타날 수 있고 나아가 국민들의 조세 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Mayer et al.(1995), 황창호 외(2017), 송현진 외(2019) 등이 제시한 정부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효과 및 Lubell(1998), Jimenez와 Iyer(2016)이 제시한 정부신뢰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효과를 뒷받침하며 정부의 관리역량에 대한 인식과 조세순응 간에 정부신뢰가 유의미한 매개변수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2(“정부의 역량이 높으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제고되고 이는 조세순응으로 연결될 것이다”)를 채택하였다. 다음 〈표 8〉은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8〉 연구가설 검정 결과

가설	결과
가설 1 : 정부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복지서비스 조세부담의 순응도가 높을 것이다.	채택
가설 2 : 정부 신뢰는 정부 역량과 조세 순응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완전매개)

## V. 결론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가 사회복지서비스 기능과 사회복지비 지출 확대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비 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조세 부담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증세가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비 지출 확대에 따른 국민들의 조세 부담 의함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많은 국외 연구들은 사회적 교환의 관점에서 정부 신뢰가 조세 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으며, 정부 신뢰가 조세 순응을 이끌어 내는 휴리스틱(heuristic)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Scholz & Lubell, 1998; Jimenez & Iyer, 2016).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부 신뢰와 조세 순응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상이한 결과들이 혼재하고 있어 이들 간의 새로운 인과관계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기존 연구의 경우 정부신뢰가 조세 순응에 미치는 관계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의 정부신뢰가 조세 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론적 축적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정부에 대한 신뢰는 그 자체로 조세 순응을 이끌어 내는 휴리스틱으로서 작동함과 동시에 정부 역량과 조세 순응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고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저신뢰 국가라는 점에서 정부 신뢰가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주관하는 정부신뢰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정부신뢰도 순위는 34개 국가 중 25위로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국민

의 비율은 36%이다(행정안전부, 2018). 또한 2017년의 경우에는 35개 국가 중 32위로 정부를 신뢰하는 국민의 비율은 24%라는 점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을 통해 조세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 신뢰가 정부 역량과 조세 순응 간의 관계를 완전히 매개한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예산을 지출한 이상의 업무 성과'를 내더라도 국민들의 조세 순응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의 역량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여 조세에 대한 순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의미하며, 정부에 대한 역량 인식보다 신뢰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 역량이 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송현진 외, 2019) 정부의 역량 또는 역량에 대한 인식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정부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조세순응을 유도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조세순응 역시 정책순응의 한 분야라고 볼 때, 정책순응에 있어 정부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차별되게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조세 순응에 미치는 영향과 인과기제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횡단면 자료를 활용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결과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연구의 결과는 특정한 시점의 인식을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에 해당 해에 한정지어 해석할 필요가 있다.<sup>7)</sup> 정부에 대한 신뢰는 특정한 시점에서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들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동일한 설문 문항과 대상을 바탕으로 꾸준한 추적과 관찰을 실시하여, 횡단면 연구 설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common source bias 문제 때문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실제보다 과장(inflated)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해석하여야 한다(Andersen et al., 2015). 이밖에,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정부의 역량이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 즉, 역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추후 검증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정부 역량과 정부 신뢰에 대한 직·간접적인 설문 문항을 보완하여, 개념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즉, 변수 활용에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보다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의 문항을 통해 조세 순응의 개념을 측정하였으나, '조세 순응'을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5점

7) 선행연구들에서 정부 신뢰와 조세 순응 간의 영향이 혼재 되어 나타나는 이유도 횡단면 연구 설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준홍(2012), 강민조(2018), 박명호·백웅기(2019) 모두 설문·대면조사를 실시한 횡단면 자료를 통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척도 또는 7점 척도를 통해 조세 순응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의 보안을 통해 정부 신뢰와 조세 순응 간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타당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민조. 2017. “우리나라 납세자의 조세순응 의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세무학연구》, 34(3): 309-331.
- \_\_\_\_\_. 2018. “정부힘과 정부신뢰에 대한 인식 및 납세에 대한 태도가 조세순응의도에 미치는 영향- 조세지식과 미끄러운 경사이론을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19(2):139-164.
- 기획재정부. 2019.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재정부.
- 김병섭. 1984.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 《현대사상연구》, 1(-): 61-88.
- 김성태 · 김명규. 2015. “우리나라 적정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모색.” 《응용경제》, 17(3): 5-32.
- 김수완 · 김영미 · 민기재. 2014. 《복지정책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및 분석 연구》, 국민경제자문위원회.
- 김준홍. 2012. “민주주의의 조세순응 효과.” 《한국행정학보》, 46(2): 115-136.
- 김태형 · Khaltar Odkhuu · 문명재. 2016.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관과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6(2): 87-112.
- 문승민. 2019.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의 공정성이 주관적 건강행복에 미치는 영향: 공공의료서비스 질의 매개효과.” 《보건행정학회지》, 29(3): 323-331.
- 문승민 · 최선미. 2018. “전자정부의 만족도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부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2(4): 119-149.
- 박명호 · 백용기. 2019. “정부신뢰와 납세순응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연구》, 8(1): 93-138.
- 변수정 · 황남희. 2018.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258(-): 41-61.
- 송현진 · 김선형 · 조윤직. 2019. “정부역량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치성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9(1):



63-91.

- 신나리 · 이영한 · 박기백. 2017. “조세 공정성 인식과 공공서비스의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에 대한 납세자의 태도분석: 통일세에 대한 선호도를 중심으로.” 《한국회계학회》, 42(6): 159-194.
- 오경민 · 박홍식. 2002. “정부신뢰 수준의 측정과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1(3): 113-135.
- 양정승. 2015. “노동시장상황과 대학생의 졸업유예 결정.” 《응용경제》, 17(4): 27-56.
- 이현국 · 김윤. 2014. “정부서비스 성과와 정부신뢰.” 《한국행정학보》, 48(4): 1-22.
- 통계청. 2018. 《2018년 출생 통계(확정)》,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보도자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9차년도 재정패널 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_\_\_\_\_. 2018. 《10차년도 재정패널 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행정안전부. 2018. 《'18년 OECD 정부신뢰도 25위로 전년대비 7단계 상승》,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보도자료.
- 황창호 · 김태형 · 문명재. 2017. “정책홍보 · 정책수단 · 정책산출 그리고 정부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국민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3(1): 223-554.

## 국외문헌

- Alm, James, & Benno Torgler. 2011. “Do ethics matter? Tax compliance and morality.” *Journal of Business Ethics*, 101(4):635-651.
- Andersen, Lotte Bøgh, Eskil Heinesen, & Lene Holm Pedersen. 2015. “Individual performance: From common source bias to institutionalized assessment.”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6(1): 63-78.
- Baron, Reuben M., & Davi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1173-1182.
- Bromiley & Cummings. 1996. *The Organizational Trust Inventory(OTI): Development and Validation*. In R. M. Kramer & T. R. Tyler (eds.),

*Trust in Organizations: Frontiers of Theory and Research*, Sage Publications.

- Bouckaert, G., Van de Walle, S., Maddens, B., & Kampen, J. K. 2002. *Identity vs Performance: An overview of theories explaining trust in government*. Leuven, Belgium: Public Management Institute,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 Cowell, Frank A., & James PF Gordon. 1988. "Unwillingness to Pay: Tax Evasion and Public Good Provi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36(3):305-321.
- Dasgupta, P. 2010. *Social Capital and Economic Performance Analytics*. In E. Ostrom and T. K. Ahn (Eds.), *Foundations of Social Capital*. Edward Elgar Publishing.
- Evans, Peter. 2009. "Government Action, Social Capital and Development: Reviewing the Evidence on Synergy." *World Development*, 24(6):1119-1132.
- Hayes, Andrew F. 2009. "Beyond Baron and Kenny: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in the New Millennium." *Communication Monographs*, 76(4):408-420.
- Jackson, Betty R., & Valerie C. Milliron. 1986. "Tax Compliance Research: Findings,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5(1):125-165.
- Jones, Thomas. M. 1995. "Instrumental Stakeholder Theory: A Synthesis of Ethics and Economic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2):404-437.
- Jimenez, Peggy, & Govind S. Iyer. 2016. "Tax Compliance in a Social Setting: The Influence of Social Norms, Trust in Government, and Perceived Fairness on Taxpayer Compliance." *Advances in accounting*, 34:17-26.
- Kaiser, Henry F. 1974. "An Index of Factor Simplicity." *Psychometrika*, 39(1), pp.31-36.
- Kogler, Christoph, et al. 2013. "Trust and Power as Determinants of Tax Compliance: Testing the Assumptions of the Slipper Slope Framework in Austria, Hungary, Romania and Russia."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4):169-180.

- Kirchler, E. 2007. *The Economic Psychology of Tax Behavio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uttmer, Erzo FP, & Monica Singhal. 2014. "Tax Morale."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8(4):149-168.
- Mayer, Roger C., James H. Davis, & F. David Schoorman.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709-734.
- OECD. 2017. "Government at a Glance 2017," OECD Publishing.
- Rousseau, Denise M., et al. 1998. "Not so Different after all: A 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393-404.
- Rudolph, Thomas J. 2009. "Political Trust, Ideology, and Public Support for Tax Cuts." *Public Opinion Quarterly*, 73(1):144-158.
- Scholz, John T., & Mark Lubell. 1998. "Trust and Taxpaying: Testing the Heuristic Approach to Collective Ac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2(2):398-417.
- Scholz, John T., & Neil Pinney. 1995. "Duty, Fear, and Tax Compliance: The Heuristic Basis of Citizenship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9(2):490-512.
- Torgler, B. 2007. *Tax compliance and tax morale: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Northampton, MA: Edward Elgar Publishing, Inc.
- Wenzel, M. 2003. *Tax Compliance and the Psychology of Justice : Mapping the Field*. In *Taxing Democracy. Understanding Tax Avoidance and Evasion*, edited by V. Braithwaite. Aldershot: Ashgate Publishing Limited.

## Government Trust can be a role for Tax compliance?

Moon, Seung Min & Choi, Seon Mi

Despite welfare expenditure and functions of government is increasing with aging society, willingness to pay of extra tax for welfare spending is low.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government trust and perception of government capabilities on the tax compliance attitude. According to the result, government trust is a link between the perception of government capacity and tax compliance. The government can't induce tax compliance without securing government trust, even if it has capability or efficiency on spending. Thus, restoring government trust is essential for tax compliance with other policy to operate national finance.

※ Keywords: government trust, government capacity, tax compliance